

## “현대자동차 자본은 법 위에 있나?”

### 현대제철, 불과 직접고용 노동부 시정지시 무시 ... “제철소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현대자동차 자본이 대한민국 법을 태연히 무시하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5월 7일 오전 충남 당진 현대제철 C지구 정문에서 ‘현대제철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지시 미이행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부 대전지청은 2월 10일 현대제철이 749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며, 3월 22일까지 74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전지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대제철 5개 업체-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였고, 4개 업체-7개 공정 749명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기한이 다가오자 내부사정을 이유로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4월 26일로 기한을 한 달 연장해줬다. 현대제철은 기한이 또 다가오자 지시이행을 무시로 일관했다. 4월 26일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현대제철은 직접고용은커녕 불법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을 위해 노동하는 파견노동자에 해당한다” 라면서 “당진제철소 대부분 공정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 1항이 파견금지 대상으로 정한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이다. 따라서 현대제철이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은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등의 작업을 한다” 라며 “현대제철은 정비는 맥시모 프로그램, 조업은 MES 시스템, 크레인 운전은 차상국 프로그램, 구내 운송은 PDA를 이용해 구속력 있는 지시, 지휘를 한다” 라고 밝혔다.

사법부는 최근 철강업종 불법파견에 관한 여러 판결에서 ‘제철소 특성상 원청과 하청업체의 관계는 유기적인 협업-분업관계’ 라고 판단하고 있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현대자동차 자본은 다시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라면서 “현대제철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꼬집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1만 명이 넘는 현대제철의 모든 사내하청노동자가 현대제철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차게 투쟁할 때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 교섭권 어떻게든 뺏으려는 SK

## SK케미칼 성실교섭 촉구... 금속노조 세우자 창구단일화 악용 교섭단위 분리 시도

금속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교섭을 회피하는 SK케미칼을 규탄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5월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 앞에서 ‘SK케미칼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이 청주공장에 금속노조가 생기자 지금까지 문제없던 SK디스커버리 소속 백신·의약품 계열 노동자들의 공동교섭을 분리하겠다고 한다”라며 “이중장대를 버리고 공동교섭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SK그룹 지주사 가운데 하나인 SK디스커버리 아래 백신·의약품 계열사로 SK케미칼, SK플라즈마가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 자회사이다.

SK케미칼 청주공장, SK플라즈마, SK바이오사이언스 등 3사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SK케미칼LS Biz노동조합으로 사측과 공동교섭을 해오다가, 최근 금속노조 SK디스커버리LS지회로 조직변경을 했다.

이들 3사 노·사는 법인은 다르지만, SK디스커버리의 백신·의약품산업을 오랫동안 벌여와서 공동교섭에 응하고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소속이던 3사의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노조답지 않고 회사의 관리와 통제 속에 노동자 관리 역할을 하는 노조를 비판하며, 지난 3월 30일 금속노조 지회를 설립하고 교섭을 요

구했다.

공동교섭에 나오던 세 개 사측은 4월 9일 노·사 상견례에서 성실교섭을 약속했지만, SK케미칼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분리 교섭을 고집하고 있다. SK플라즈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성실교섭을 위한 실무협약과 기본협약체결에 나오고 있지만, SK케미칼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SK케미칼 청주공장은 울산공장과 한 법인이다. 의약품을 제조하는 청주공장의 금속노조와 유기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울산공장의 한국노총 노조 등 두 개의 복수노조 상태다. 울산공장 한국노총 조합원이 200여 명 많다.

금속노조는 SK케미칼이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SK케미칼 청주공장의 교섭권을 금속노조에 넘겨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본다. SK디스커버리LS지회 교섭

에서 SK케미칼 청주공장 교섭을 빼겠다는 계획이다.

이정배 금속노조 SK디스커버리LS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SK케미칼은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조 금속노조로 바뀌자 3사 공장 노동자 사이를 가르려 한다. SK케미칼의 교섭회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SK케미칼의 음모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다”라며 “SK케미칼이 청주공장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박탈하며 우롱하면, 금속노조는 결단코 묵과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SK케미칼, SK플라즈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19 등 백신을 생산하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라며 “백신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만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3사 사측은 기존 공동교섭 방식으로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증권거래소 앞에서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기념으로 북을 쳤다”라면서 “금속노조가 SK디스커버리LS지회와 함께 SK 현장 낚은 관행을 날리며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라며 북을 세 번 쳤다.

# “박창수 위원장 영혼이라도 함께 공장 가고파”

## 한진중 박창수 열사 30주기 추모 ... 국정원 정보 제공 거부로 타살 진실 못 밝혀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1991년 의문사 당한 박창수 열사 30주기를 맞아 고인이 숨진 경기도 안양에서 추모대회를 열었다.

5월 6일 저녁 안양샘병원 앞에서 연 ‘의문사 진상규명·열사 정신 계승·민주노조 사수, 박창수 열사 30주기 추모대회’에 열사 유가족과 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가 함께했다.

심진호 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은 추모사에서 “열사와 같이 일했던 조합원 대부분 정년퇴직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며 “고인이 목숨 바쳐 지키려던 민주주의와 민주노조가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심진호 지회장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투기자본이 회사를 인수 중이고, 사측은 노동조합을 둘로 쪼갰다”라며 “힘들 때마다 열사가 외쳤던 ‘노동의 가치’를 떠올린다. 열사를 잊지 않고 노동이 인정받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모제에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참석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추모사를 통해 “언제쯤이면 울지 않고 박창수 열사를 떠올릴 수 있을까”라며 “그는 청



춘을 함께 보낸 친구였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함께 꿈꾸었던 동지였다”라고 회상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의문사로 남겨진 박창수 열사 죽음을 명백한 타살이라고 확신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박창수 열사가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도위원은 “박창수 위원장을 변호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박창수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주검마저 빼앗긴 기막힌 세상을 살아 서른 번째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고 박창수 위원장과 한진중공업 배관공 입사 동기인 김진숙 지도위원은 “같이 복직하고 싶었던 내 동기, 박창수 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주던 배관공장으로 다시 가고 싶다. 박창수 열사의 영혼이라도 함께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창수 열사는 1981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배관공으로 입사했다. 노조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87년 현장 동료들과 함께 어용노조를 몰아냈다. 이어 90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열사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아래 전노협) 투쟁에 앞장섰다. 중소기업노조 중심으로 1991년 1월 출범한 전노협에 조합원 3천5백 명의 한진중공업노조가 참여했다. 전노협 소속 사업장 중에 규모가 가장 컸다. 전노협과 대기업노조를 결합한 박창수 위원장은 당시 노태우 정권의 눈엣가시였다.

박창수 위원장은 1991년 2월 9일 경기 의정부에서 연 대우조선 투쟁 지원 연대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잡혔다. 대공분실을 거쳐 ‘3자 개입금지’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박창수 위원장은 5월 4일 부상 치료를 위해 경기 안양병원(현. 안양샘병원)에 입원했고, 이틀 뒤인 6

일 새벽 병원 마당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5월 7일 영안실 벽을 뚫고 들어와 고인의 시신을 도둑질했고, 강제 부검했다. 노태우 정권은 시신 강제 탈취를 위해 전경 22개 중대와 사복 진압경찰(백골단)을 동원했다. 경찰은 부검 뒤 고인이 처지를 비판해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죽기 전, 신원 미상 남자들이 박 위원장의 병실을 드나들었고 사망하기 직전 병원 옥상에 함께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쇠창살과 자물쇠로 잠긴 병원 7층 옥상에 박 위원장이 어떻게 올라갔고, 떨어져 죽으려던 사람이 왜 링거 바늘을 달고 옥상에 올라갔는지, 자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황이 많았다.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박창수 열사에 대한 전노협 탈퇴공작을 조직 차원에서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기부가 박창수 위원장 수감 직후부터 전노협 탈퇴를 종용하며 고문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아직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 금속노조, 산재처리 지연시킨 노동부 장관 등 고발·공익감사 청구

금속노조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 등이 저지른 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위반과 산재보상 사업 관장·관리·감독 의무 불이행 등의 죄를 처벌해달라며 고발했다.

더불어 노조는 감사원에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위법·부당 행정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 사무처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가 위법 또는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19세 이상, 300명 이상 국민의 연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노조는 5월 6일 울산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 공익감사 청구와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이 산재보상보험법 1조, 시행규칙 8조·20조·21조 등을 어겨 ‘신속·공정한 보상, 산재노동자 재활과 사회 복귀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을 훼손하고, 산재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1조는 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 여부를 신청인과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단이 2020년 공개한 평균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172.4일, 근골격계 산재처리 기간은 121.4일이다. 법은 일주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지만, 공단은 17배 이상 시간을 끌고 있다.

법 시행규칙 8조는 판정위원회는 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심의를 의뢰하면 20일 이내에 판정·통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차례 1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단이 밝힌 2020년 전국 여섯 개 판정위 평균 판정기간은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시 49.4일이었고, 특별진찰하지 않았으면 44.9일이 걸렸다.

법 시행규칙 20조는 산재노동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공단은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는 10일 이

내에 신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단은 법의 취지에 따라 회사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즉시 산재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임의로 사측의 의견 제출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려주고 있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회사가 버티는 기간이 길어지면 재해조사부터 지급 여부 결정까지 모든 절차가 몇 달씩 늘어진다.

노조는 “노동부가 산재처리 지연으로 노동자가 생계 고통, 해고 위협, 건강 악화 등에 시달리는 현실을 알고도 산재보상 업무 위탁 기관인 공단의 위법·부당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산재노동자 권리를 짓밟았다”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산재처리 지연 사태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립한 2008년 이후 약 14년 동안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도 관리·감독하지 않아 산재보상 업무 관장을 규정한 법률책임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